



세계타임조

☎ 대표전화: 1661-8385 www.thesegye.com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제 3248호〉

송언석 원내대표,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 "대검·법무부 항의방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송언석 즉각 국정조사 협의"···추가 규탄집회도 검토 檢에 신중판단 얘기' 정성호 해명에 "대장동 변호인인가···외압 자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 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 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 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의 원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고, 시각을 조율 중"이라 고 말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 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 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선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 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점에 대해선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고 전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시를 하는 방 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 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장 외투쟁까지도 말했는데 내일과 모레 진 행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 다"며 "모레쯤 당원들이 모여 추가로 규 탄 집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 장관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 (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발언인지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가지 않는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 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채봉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종묘 앞 초고층 턱하고 숨 막혀" 마구 결정할 일 아냐

종묘 찾아 점검 종묘 눈 가리고 기 누르게 할까 걱정, 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무리한 한강버스 시민부담 초래 지적도 김건희 겨냥 "왕도 못 지나가는 길인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 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 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 검했다.

종묘 앞 풍경을 바라보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m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동행한 취재진에게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 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 안이 아니고, 한 시기에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

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언급했다.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허 청장으로부터 시설 설명을 듣던 도중 김건희 여사의 종묘 무단출입 및 '차담회' 논란을 겨냥한 듯 "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인데그렇게 한 것이었군요"라고 말했고, 둘러보는 도중에도 출입이 제한된 계단앞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올라가지 말자"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김 총

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 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기채보 기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13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3 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 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안, 은행법·가맹시업법 개정안 등은 13 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 자는 취지에서다.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 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 류됐다.이밖에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 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 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올라 가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 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하기 로 했다.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 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 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귀영 기자

